

KS' 관리 대폭 강화

공진청, 환경부적격 업체엔 불허

앞으로 시판품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고 특별 공장검사도 찾아지는 등 KS표시 허가공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한편 KS표시 허가신청 절차는 많이 간소화된다.

또 점차적으로 KS행정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환경관리 부적격업체에는 KS표시가 허가되지 않는다.

공업진흥청은 KS표시 허가공장이 계속 증가, 현재 4,056개에 이르고 있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가 어려운 데다 지난 92년 9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크게 줄인데 따른 부작용이 겹쳐 정부 인증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진청이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선안은 KS표시 허가신청때 제조가공 설비명세서 등 4종의 첨부서류가 폐지되며 ISO 9000 인증공장의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제품심사만 하는 한편 적절한 관리를 위해 KS표시 허가행정을 지방공업기술원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정보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의 제의가 있을 때만 실시하던 특별공장 검사도 앞으로는 회수를 늘려 생산중단·양도·양수·시설확충, 축소 등의 경우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불만' 개선한다

특허청, 심사관 78명 파견

특허청은 기업체 등 특허출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월과 6월중 기업체에 대규모로 공무원을 파견,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지난달 특허청은 최근 산업재산권제도의 개혁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불만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이번달 사이에 43개 업체에 78명의 심사관을 파견했다.

대상업체는 삼성전자와 (주)럭키 등 특허출원이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이다.

이들 심사관은 담당분야와 관련된 기업체의 특허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연구부서가 출원을 의뢰하고 이것이 특

허전담 부서 및 변리사 사무실을 거쳐 특허청에 출원되는 과정, 심사과정 등 각 단계별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한편 개인출원인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된 특허 애로사항은 지난달과 이달초 두차례에 걸쳐 해소방안과 함께 수집되며 이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기협동화대상 신청절차 완화

중진공, 전시관 매장·물류단지 등 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협동화 대상사업을 완화하는 한편 협동화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달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유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매장과 물류단지 협동화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생산시설 위주로 협동화를 지원해 왔으나 물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초 공동 창고사업을 포함시킨데 이어 이번에 다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동화사업 참여자격은 과거 1년간 가동중인 중소기업에서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완화했다.

신청서류도 간소화, 사업계획수립 능력이 미흡한 사업자가 협동화 참가 의사를 표시하는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중진공 경영 기술지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신청업체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사업자등록증 등 15종의 서류첨부도 없앴에 따라 신청서식은 종전 20쪽에서 2쪽으로 줄어들게 됐다. 평가절차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하던 것을 중소기업자 여부 공동시설 이용여부 등 기본요건만 충족시키면 가능토록 했다.

신소재산업 집중육성

과기처, 국제협력 전략 특화

'2010장기계획' 시안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지난달 고

려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재 공동부문 국제화 부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신소재 기술 분야에서는 신소재 산업을 21세기 전략 중추산업으로 육성, 2010년에는 이 분야 기술수준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별로 국제협력 전략을 특화하는 등 국제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해외진출 및 현지연구를 강화, 연구기관의 국제화를 도모기로 했다.

환경마크제 도입

경총, 96년 하반기부터

오는 96년 하반기부터 국제표준화기구가(ISO)가 인증하는 환경마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ISO환경기술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호주에서 2개국에 참석한 가운데 2차총회를 갖고 오는 96년 하반기부터 ISO가 인증하는 환경마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참석국들은 국가별 인증기관이 ISO가 요구하는 환경 관련 규격에 맞는 상품에 별도로 디자인한 환경마크를 부착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ISO환경마크 부착 상품의 요품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광고에 대해 소비자나 외국의 바이어들이 근거 입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입증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Q마크' 관리 강화

허용기준 상향 · 통일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공업진흥청 산하 6개 시험연구소가 지난 82년부터 단체자율 규격으로 시행하고 있는 Q마크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달 공업진흥청은 Q마크 취득업체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일부업체는 과대광

고를 일삼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업진흥청은 이를 위해 Q마크 허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통일화하는 한편 중요 심사항목에 과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시 허위 과대광고 금지를 명문화하고 시판품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기술정보센터 예산낭비 우려

기술원과 유사업무에 중복 투자

특허청이 특허정보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산업기술정보원과의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특허청 및 기정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발명특허협회를 내년부터 발명진흥협회로 개편, 육성시키고 이를 위해 산하에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기술정보원이 이미 특허정보 유통업무를 해오고 있어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정원은 국내의 공고특허, 공고실용신안 등에 대한 정보 69만여건을 데이터 베이스로 제작, 제공하고 있다며 특허기술정보센터가 기정원과는 다른 별도 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센터의 설립근거가 되는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이 센터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선행 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장이 설립을 허가하거나 기존의 법인을 지정,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정원과 발명진흥법에 의해 세워질 발명진흥회가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이면서도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기지원센터 설립

내년부터 지역별 운영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

역별로 건립,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에 2개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상담실, 상설 전시 판매장, 수출입 대행업무 및 외국어서비스, 창업지원, 기술지원, 협동화 지원, 공동실험,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남아 투자조사단 파견

무공, 투자상담 등 수출기반 조성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태영실업 등 10개 중소기업체들로 구성된 서남아 투자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등 3개국을 순방하며 현지 무역관 주선으로 투자상담을 벌였다.

이번 조사단은 진흥부회장을 단장으로 신성엔지니어링, 청우공업, 대성정밀, 유천, 보국전기공업 등 기계류 산업설비 엔지니어링업체 20개사가 참가했다.

추진단은 3개국을 순방하면서 현지 간담회, 공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투자 검토작업을 벌였다.

단체규격 제정신청 활발

공진청, 지난해 2배인 40품목

단체표준이 활성화 되면서 표준규격에 대한 제정 신청이 늘고 있다. 공업진흥청 따르면 사내규격과 국가규격의 교량역할을 하는 단체규격 제정신청이 올 5월말까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배정도 늘어났다.

지난 1월 농기구조합에서 5개 품목의 승인을 받는데 이어 전기공업조합에서 특고압 교류개폐기 등 6개 품목, 골판지조합에서 수박골판지상자 등 7개 품목, 플라스틱조합에서 13개 품목 등 모두 40개 품목에 대해 제정 신청을 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건 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이같이 단체표준이 증가하는 이유는 올 3월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의 참가자격을 공진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프타 무관세화 추진

상공부, 화학무기 개발·생산 조사

상공자원부는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발효되는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대비, 올 하반기중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해주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는 석유화학 사장단 조찬모임에 참석,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현재 나프타에 부과되고 있는 1%의 잠정 관세율을 내년부터 무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UR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나프타를 포함, 기초유분에 대한 관세를 완전 면제해 줘야할 입장이다.

정 차관보는 또 내년부터 발효되는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대비하여 올 하반기중에 화학무기 개발, 생산, 보유, 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사업화 알선센터 설립

특허청, 자금·기술 실용화 지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알선센터가 신설돼 자금지원이 쉬워질 전망이다.

안광구 특허청장은 내년 1월1일 기존의 한국발명특허협회를 한국발명진흥회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설립해 특허등록된 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시간 노력과 경비를 투입해 특허권을 획득하고도 자금이 달려 사업화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특허기술 복덕방 노릇을 할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터는 우선 전문기술연구소에 의뢰해 해당 특허기술의 기술성을 면밀히 평가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이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특별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면 이 센터 명의로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다.